

성명서

우리는, 제44회 전국역사학대회 조직위원회 추천 패널 「끝나지 않은 일제와의 전쟁(일제 말기 강제동원)」에서의 진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일제 강점으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청산하는 작업이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우리는,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의 다양한 사실들을 검토함으로써 그 강제동원이 한국인들에게 실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고, 그 피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국인들의 삶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는,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이, 당시의 한국 정부·일본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의 담합으로 인해, 강점 청산 문제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 왜곡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인 피해자들을 옥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교과서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등 한일간의 진정한 우호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는,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 중인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한국인 피해자들의 소송이 피해자들의 생전에 그들의 '지체된 정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며,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이고도 전면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는, 일제 강점의 청산이라는 과제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법조계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역사적 나태'로 인해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남아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학자·법률가·사회운동가를 포함한 모든 한국인이 지금 당장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우리는, 고령의 피해자들이 가슴 속에 한을 품은 채 해가 다르게 격감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전면적인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힘주어 촉구한다.

1. 한국 정부와 국회는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한국인 개인이 일본 및 일본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조치를 즉각 취하라.
2.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일제의 강점과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가기구를 설치하는 조치를 즉각 취하라.
3.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일제의 강점에 관한 일체의 자료와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협정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는 조치를 즉각 취하라.
4.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일제의 지배가 불법강점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개정 또는 재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5. 한국의 학계와 법조계는 일제 강점의 청산을 위한 학문적·실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라.

2001. 5. 26.

「끝나지 않은 일제와의 전쟁(일제 말기 강제동원)」 참가자 일동

(강정숙, 김광열, 김명섭, 김민철, 김은식, 김창록, 노영중, 신영숙, 신주백, 안자코유카, 요시자와후미토시, 이경민, 이아현, 이연식, 정대성, 정연진, 조진석, 주정립, 하종문, 허수열)